

위명여권 소지자 추가 구제대책 나오나



위명여권 사용 전력이 있는 동포에 대한 사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가 이들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법무부 한 관계자는 12일 "지난해 위명여권 자진신고 기간에 미처 신고를 못한 동포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불법체류자 전락을 막기 위해 운영한 제도인 만큼

이들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명여권이란 발급 단계에서부터 다른 사람의 신상정보를 기재하고 사진만 자신의 것을 붙인 일종의 위·변조 여권을 가리킨다. 법무부는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여권 정

보 신원 불일치자'(위명여권 소지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국내에서 2천868명, 국외 1천392명 등 총 4천260명이 자진 신고했다. 지난해 자진신고한 이들은 입국 규제 기간인 6개월이 지난 현재 비자 재신청을 통해 재입국하고 있다.

전국 대중교통 실시간정보 제공

내년 말까지 전국의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 정보를 묶어서 제공한다고 국토교통부가 4일 밝혔다. 대중교통 정보가 한곳에 모이면 민간 업체가 전국 실시간 갈아타기 정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현재는 버스와 지하철, 기차 등을 갈아탈 수 있는 경로는 알 수 있지만 갈아타는 시각 정보는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4일부터 다음과 네이버, 티맵(T map)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대중의 버스 실시간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와 다음 등은 서울, 부산, 경기도를 비롯해 일부 도시의 버스 실시간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지만, 인천, 대구, 광주, 울산 등 대부분 도시에서는 버스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부터 대중교통정보 서비스 민·관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교통 정보를 수집해 제공하고 민간은 서비스를 맡게 된다.

한국말 못하면 결혼비자 못 받는다



한국에서 기본적인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인에게만 결혼비자를 내주는 정책이 추진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본적 부양능력이 없는 한국 내국인은 외국인과 결혼이 제한될 전망이다. 한국 법무부는 30일 오전 정부와 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기관장·해외주재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법무부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조차 되지 않는 외국인이 한국내로 들어와 혼인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보고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비자 인터뷰

부시 기초적인 한국어 구사 능력을 심사하기로 했다.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는 6개월 후에 재심사하고 재심사에서도 탈락할 경우 한국 입국 후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율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하게 된다. 법무부는 "영국,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등 이민 선진국에서도 결혼이민자의 기초적인 어학능력을 결혼 비자 심사 기준에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과의 결혼하는 한국 내국인은 동거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충분한 공간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월 평균소득이 법무부가 정하는

그러나 자신신고 당시 정부 정책의 불신으로 강제퇴거될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은 중국 동포와 함께 가족이 단속돼 추방된 이들에 대한 사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중국 동포 50여명이 이들에 대한 사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서경석 서울조선총교회 목사는 위명여권 사용 전력 중국 동포에 대한 사면을 촉구하며 한 달 가까이 단속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기 체류를 통해 국내에 생활기반이 다 형성된 사람들의 경우 단속시 10년간 입국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구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신고기간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위명여권 소지자로 적발되면 강제퇴거 명령과 입국금지 10년 규제를 받게 된다. 위명여권 사용 전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2007년 방문취업제도 시행 들어 왔던 중국동포 상당수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방문취업동포는 사회통합의孝子?

이민자정책에 있어서도 사회통합은 단연 중요한 화두다. 얼마 전 모 대학교에서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찾는다'는 주제로 학술회의가 있었다. 국내 체류 이민자의 사회통합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먼저 영주권자(F-5체류자격)와 귀화자의 비교이다. IOM 정기선 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귀화자가 영주권자보다 소득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화자의 남녀 성비는 77:23. 여자가 남자보다 3배 넘게 귀화하는 셈이다. 필자는 학술회의에 참가하기에 앞서 한 지인의 질문을 받은 적 있다. 그는 그동안 다문화사회 관련 연구를 꽤 했는데 중국동포를 모르면 제대로 된 연구가 어렵다면서 중국동포들은 귀화자와 영주권자 누가 더 많냐 물은 적 있다. 오늘 이 지면을 통해 답을 보낸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취득보다 귀화허가과정의 어려움이 귀화자보다 영주권자가 많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동포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실제로 귀화자가 영주권자보다 2배 더 많다. 한국의 전체 귀화자는 12만 명. 그 중 중국동포 출신 귀화자 비중이 61%다. 이처럼 많은 동포들이 귀화한 것에 대해 여타 외국인들은 한국이 같은 민족에게 우대정책을 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작 귀화동포 당사자들에게 물어보면 그렇지도 않다. 귀화를 희망하는 동포들에게 모두 허가



▲ 문민

를 해도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귀화과정이 결혼이민자보다 어렵다고 한다. 이러한 기대감은 귀화 후 소속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호(서울대)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귀화자 출신의 한국에 대한 소속감은 중국보다는 캄보디아와 필리핀 출신이 압도적으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계 중국인 및 중국계 귀화자들의 소속감은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귀국동포 중 귀화자는 일부에 불과하다. 가장 많은 체류형태가 방문취업(H-2체류자격)이다. 현재 방문취업 쿼터는 30만 명. 한국정부의 입국제한으로 추첨을 통해 들어오고 있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 방문취업(H-2)동포의 사회통합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흥미로운 것은 방문취업 동포가 재외동포(F-4체류자격)보다도 사회통합지수가 월등히 높았다. 연구자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석했다. 이들 집단의 사회통합도가 높은 이유는, 사회문화영역의 배접이 여타 체류자격보다 높게 나타났

을 뿐만 아니라 이들 스스로의 주관적인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이들은 재외동포(F-4)집단에 비해 한국입국의 목적이 뚜렷하고, 현재 한국에서 일자리를 얻어 생활하면서 취업 이외에는 상대적으로 특별한 욕구가 없는 집단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대다수가 중국을 모국으로 하는 재외동포라는 점에서 우리사회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소속감이 결과적으로 이들의 사회통합도를 높이는 데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똑같은 출신국 대상이지만 국내에서 체류형태에 따라 사회통합 정도가 다르다는 결론이다. 그것도 체류제한이 열악할수록 사회통합 정도가 높단다.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적은 비용으로 이민자 사회통합을 실현한 셈이다. 정부는 그동안 사회통합을 위해 전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글로벌센터 등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기관을 수백 개 설립하였다. 하지만 정작 30만 귀국동포들을 위한 지원기관은 전무하다. 그럼에도 사회통합을 그럭저럭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은 귀국동포들의 숨은 공로가 아닐까 싶다. 사회통합지수는 불편하는 것이 아니다. 귀국동포 상당수는 귀화를 희망한다. 그들이 귀화후에도 높은 사회통합 정도를 갖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문민

영등포경찰서

4대 사회악 근절 및 전략적 홍보활동 시작

서울영등포경찰서(서장 남병근)는 2013년 6월 4일 07:50 ~ 08:50까지 1시간 동안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성폭력 주변에서 경찰서장, 신종지구대장, 청렴동아리 "영심회" 회원 등 경찰관 30여명과 영등포구 장애인 성폭력 대책 협의회 외 장애인단체 회원 120명이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합동으로 캠페인을 실

시하였다. 이 캠페인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영등포경찰서와 영등포구 지역 내 장애인 단체 간에 “장애인 성폭력 대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던 중 4대 사회악 근절에 대한 전략적 홍보를 위하여 합동으로 실시하게 된 것이다. 장애인 성폭력 대책 협의회는

지난 3월 27일 영등포경찰서와 지역 내 5개 장애인단체(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장애인부모회, 장애인정보화협회)간에 구성된 협의체로 국정과제인 ‘성폭력으로 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장애인 성폭력 근절 대책 및 예방을 위해 지역 단체와 구

동료 월급 4억 9천 5백만원 편취한 피의자 구속

서울영등포경찰서(서장 남병근)는 회사 직원인 동료의 월급 4억 9천 5백만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하여 구속하였다. 사건의 경위는 이러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보험대리점의 전산관리 직원인 피의자 S○○대리(24세, 남)가 회사의 법인계좌를 관리하는 신고자 K○○ 부장 몰래 보안 카드와 공인인증서를 훔쳐 가지고 있다가 직원들의 월급날로 거액의 월급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2013. 5. 24. 11:12경 S○○대리의 ○○은행 등 3개의 은행 계좌로 495,000,000원 전액을 나누어 이체한 후, 각 은행을 돌아다니며 모두 5만원권으로 인출하여 불상지도 도주했다. 영등포경찰서 경제수사팀은 지난 2월부터 주도형 탐장제(탐장의 자리를 출입문 입구에 배치하여 직

접 민원인을 먼저 맞아 수사민원 상담, 접수, 수사지휘)와 함께 민원인 편의를 위한 24시간 즉일 상담.접수, 세븐일레븐계 등 국민 중심의 수사 활동을 시행해 오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도 탐장주도하에 6명의 수사요원으로 각자 임무를 부여하여 집중수사체제로 전환하고 피해금 4억9천5백만원이 이체된 피의자의 은행계좌에 대하여 부정계좌로 등록하여 거래정지를 요청하였고, 피의자의 출입국조치 결과 중국으로 출입국했던 자료가 있어 출국금지조치를 했다. 이후 피의자와 전화통화를 한 친구, 가족, 동료, 지인 등을 탐문 수사하던 중 고양시 장항동 주변에서 은신중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회에 걸쳐 고양시

장항동 주변 공인중개사,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등 수사하던 중, 5. 30. 21:50경 고양시 장항동 ○○카페에서 은신 중이던 피의자를 발견하고 지문조화를 통해 사건 접수 6일 만에 조기 검거했다. 피의자는 검거 당시 현장에서 자신은 신○○가 아니라고 완강하게 부인하였고 피해자와의 영상통화를 하면서도 “이 사람이 누구냐”는 등 인적사항 자체를 부인하였으나 지문 대조로 피의자 S○○와 일치하자 뒤늦게 본인의 범행을 인정했다. 영등포경찰서 경제수사팀은 악성 사기범죄, 다액 사기피해, 서민경제 범죄피해 등에 대하여 발로 뛰는 집중 수사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본사기자

주민등·초본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절반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수수료를 절반인 200원만 내면 된다. 현재까지는 주민등록표를 민원창구를 방문해서 발급받으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나 차이가 없이 400원의 동일한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 10일부터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소재지 방문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에서든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현재는 전입세대 열람을 위해서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또 전입세대 열람시 경매신청자·신용정보업자 등 일부 열람권자에 대해서 전입 세대주 등의 성명 중 이름을 제외한 성(姓)만 표기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게 된다. 아울러 거주사실조사 후 최고장을 발송하기 전에 본인 또는 세대주에게 휴대전화 문자 등의 방법으로 사전 안내하도록 해 사실과 다른 직권조치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부실 신고된 구 주민등록증 회수 규정을 마련하는 등 주민등록제도를



보완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후 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류순천 안행부 지방행정정책관은 “민원인들의 부담을 줄이

고, 편의가 증진되며,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방지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안전행정부 주민과 02-2100-3983 /강청화 기자